

#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	45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9. 3. 6.

발 의 자 : 김인식 의원외 5인

## 1. 제안이유

최근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마. 다문화가족 전담민원상담창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).
- 바.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
나. 합 의 :

##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시장의 책무)**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 및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지원사업)**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
2. 한국문화·사회적응 교육과 직업훈련 실시
3. 상담, 종합생활안내 및 정보 제공
4.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
5. 보건, 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
6.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
7.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4조(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)** ①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구성 및 운영)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,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대전광역시의회 의원
2.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3. 다문화가족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

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⑦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대전광역시

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⑧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7조 (다문화가족 전담민원상담창구)** 시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외국어로 민원처리절차 안내 및 상담 등을 위한 전담민원상담창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포상)**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련 법 령

## □ 다문화가족지원법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2. "결혼이민자등"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
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
**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,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·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7조(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, 부부교육, 부모교육,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,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**제9조(산전·산후 건강관리 지원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·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·건강에 대한 교육, 산전·산후 도우미 파견,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아동 보육·교육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·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,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11조(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·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 
찬 성 의 원 서 명

[illegible]

#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9. 3. 13  
교육사회위원회

## I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9. 3. 6 김인식의원외 5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3. 10

다. 상 정 일 자 :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 
제2차 교육사회위원회(2009. 3. 13)  
상정, 질의, 심사, 원안가결

## II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인식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속에서 조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


- 라. 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5조 내지 제6조).
- 마. 다문화가족 전담민원상담창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.
- 바.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함(안 제8조).

### III.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권태환)

본 조례안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이 제정(2008.3.21)·시행(2008.9.22)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다문화가족이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####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는 목적을,
- 안 제2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 및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3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5조는 협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,

- 안 제6조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7조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외국어로 민원처리절차 안내 및 상담을 등을 위한 전담민원상담창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8조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##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 적응 등 지역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,
- 현재,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남도, 전라북도이며, 기초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동·서구, 경기도 가평군, 전라남도 영암군, 전라북도 순창·임실군, 경상남도 거창군 등으로,

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 하여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도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본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많은 관심과 사업예산의 확보·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.

IV. 질 의 요 지 : 생 략

V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V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